【 문제-1 】 (30점)

甲은 자기 집 부근의 도로를 건너다가 乙이 운전하는 乙 소유의 승용차에 치였다. 甲은 이 사고로 다리와 허리 부위를 다쳐서 전치 15주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甲은 乙이 자신에게 교통사고를 낸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甲에게도 사고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제대로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합의를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甲이 자동차 사고로 입은 손해가 乙의 과속 내지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로 치료비 3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 도합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후 甲의 청구 중 재산적 손해 부분은 전부 인용하였으나, 위자료는 500만 원만 인용하여, 乙에게 도합 3,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甲이 이 판결 중 위자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乙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던 중 甲은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2천만 원이 더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甲은 항소심에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액을 5천만 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0점)

(2) 甲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乙에 대해 3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乙로부터 손해배상을 해줄 터이니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甲이 乙의 사무실로 들어가니 주위의 몇몇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좋은 말로 할 때 합의를 하라고 종용하여, 甲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乙이 제시한 1천만 원의 합의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였다. 변론기일에 출석한 甲과 乙은 乙이 甲에게 1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甲은 소를 취하하며, 이후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소송상 화해를 하여,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었다.
이 화해가 성립된 후, 억울함을 느낀 甲은 위 소송상의 화해가 乙 측의 강박에 의하여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 화해조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3) 甲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乙은 자기가 준비 중인 시의원 선거 출마가 무산될까 두려운 나머지 甲에게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제발 소를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이 서명한 손해배상 각서를 甲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甲이 얼마를 요구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 각서의 손해배상 액수 부분이 비워진 채 교부되었다. 이 각서를 받은 甲은 얼마 후 乙에게 5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너무 액수가 많다고 거절하자, 甲은 임의로 이 각서에 손해배상 액수를 5천만 원으로 기재하여 乙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각서가 법원에 제출된 후 乙은 각서상의 서명은 자기 것이 맞으나, 甲이 무단으로 액수를 기재하였으므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각서를 증거로 인정하여 乙에게 5천만 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 문제-2 】 (20점)

甲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乙에게 영업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자금으로 2억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乙이 약속한 기한을 어기고 반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甲이 乙에게 위 금전을 빌려주면서 함께 작성한 프랜차이즈 및 소비대차 계약서에는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乙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당초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甲과 乙의 주소지가 모두 A 시에 있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후 乙이 B 시로 이사를 가서 현재 乙의 주소지인 B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甲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여야 한다. 甲은 고심 끝에, 민사소송법에서 의무이행지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른 의무이행지인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A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A 법원에 이 소의 관할권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2) 甲이 乙을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인 C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리하여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乙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C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되었다. 乙은 항소심 계속 중 甲과 乙 사이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甲이 수익이 잘 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자금을 빌려주고 자신을 현혹시켜 계약을 하게 하여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은 乙의 반소제기에 동의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C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인 D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10점)

【 문제-3 】 (30점)

丙은 자기가 사망하면 자기 소유의 재산 가운데 A 토지를 甲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 丙이 사망한 뒤에 丙의 상속인인 乙이 A 토지의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甲은 乙을 상대로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제1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甲이 항소하였다. 이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일 때 甲은 A 토지가 지자체의 공공사업을 위하여 수용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이 소송절차에서 甲은 乙을 상대로 A 토지가 수용될 경우에는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2의 소)를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다.

(1) 제1의 소가 항소심 계속 중일 때 이러한 제2의 소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항소심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A 토지의 수용 여부는 확정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2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3) 항소법원은 심리 후 두 개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乙은 이 가운데 제2의 소에 대한 판결에만 상고하였다. 이러한 경우 甲은 '제1의 소에 대한 판결에는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0점)

【 문제-4 】 (20점)

乙은 丙에게 금 5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위한 담보로 甲 소유의 A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당시 丙은 甲이 자기에게 A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乙에게 진술하였다. 丙이 5천만 원의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자 乙은 A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였다. 甲은 丙에게 이러한 저당권 설정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乙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이 소송에서 甲은 "자기는 丙에게 A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乙은 "그 당시 甲이 이를 위한 대리권을 丙에게 수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甲이 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乙은 변론에서 '甲이 이러한 저당권설정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 적이 없다. 법원은 증인신문을 통하여 甲이 丙의 저당권설정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甲이 丙에게 A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은 없고, 丙이 대리권 없이 한 저당권설정행위를 나중에 추인하였다'고 판결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0점)

(2) 제1회 변론기일에 甲은 "자기는 丙에게 A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乙은 "甲이 丙에게 이러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은 없지만, 며칠 뒤에 丙의 저당권설정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2회 변론기일에 乙은 이러한 진술을 철회하고, "甲이 丙에게 이를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乙은 '甲이 丙에게 A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한 진술을 철회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0점)